

---

# 부마항쟁과 한국언론

차성환 / 부산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

---

## 目 次

- |                    |                      |
|--------------------|----------------------|
| I. 서 論             | IV. 부마항쟁과 언론의 대응     |
| 1. 연구의 의의          | 1. 언론에 나타난 부마항쟁      |
| 2. 연구의 방법          | 2. 부마항쟁에 대한 언론인의 대응  |
| II. 유신체제 하의 한국언론   | 3. 부마항쟁에 나타난 언론인의 유형 |
| 1. 유신체제의 언론통제      | V. 결 論               |
| 2. 유신체제와 언론인의 저항   | 참고문헌                 |
| 3. 부산지역의 언론 상황     | 국문초록                 |
| III. 부마항쟁과 언론자유 문제 | Abstract             |
| 1. 저항 이슈로서의 언론자유   |                      |
| 2. 저항 대상으로서의 언론    |                      |

## I. 서 論

### 1. 연구의 의의

1972년에 성립하여 1979년에 붕괴한 유신체제는 한국언론사에 있어 국가권력에 의한 언론자유 억압과 통제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로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억압과 통제의 결과, 이 시기 한국언론은 외부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한 통제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자기 검열에 의한 통제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유신체제 성립 이후 1974년과 1975년에 걸쳐 동아일보 등을 중심으로 일어난 언론인들의 ‘언론자유실천투쟁’이 유신정권과 그에 굴복한 언론사주에 의해 폭력적으로 탄압받은 이후 언론계는 더욱 깊은 굴종을 강요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언론자유 의 억압과 통제로 말미암아 한국언론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었으므로 양심적 언론인들은 깊은 자괴감에 빠져들었고 많은 지식인과 국민들에게 지탄과 매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1978년 12월 총선 이후 야당의 반유신투쟁과 학생, 민중들의 민주화투쟁이 점차 수위를 높여 감에 따라 정국은 긴장국면으로 빠져 들어갔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에 따라 일부 언론은 법, 제도적 한계 속에서만 사실 보도에 충실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회복해 보려는 시도도 일부 나타나는 듯 했다.

그러나 1979년 10월 16일 부마항쟁이 발생하자 이 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언론인들은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해 보도 자체가 봉쇄된 가운데 통상적인 상황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정치변동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도 언론인들은 심각한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의 언론 통제가 거의 완벽한 수준에 도달했던 유신체제 말기에 발생한 대규모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여 언론사와 언론인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던가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 주제를 다룬 내용은 당시 국제신문 기자였던 조갑제가 쓴 『유고!』라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기록물에 나타난다. 그러나 『유고!』에서 이 주제는 작은 부분으로 취급할 뿐이므로 매우 불충

분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부마항쟁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언론과 관련한 영역을 주제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고 정치변동기 언론의 또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 1.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부마항쟁에서 나타난 언론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로부터 정치변동기의 언론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이끌어내려는 시도이다. 이 주제와 관련한 본격적인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1974~5년의 언론자유실천투쟁과 관련한 연구 또는 1970년대나 유신체제 하의 언론통제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부마항쟁과 언론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이다. 주제와 관련한 문헌을 통한 연구를 기초로 한다. 부마항쟁과 관련한 저작물을 출간한 거의 유일한 언론인인 조갑제의 『유고』 1,2권도 자료로 활용하였다.

둘째, 당시의 신문 등 보도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그러나, 보도통제로 인해 제대로 된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자료들의 기여는 한정적이다.

셋째, 부마항쟁 전후의 정치사회적 조건으로 인하여 언론과 언론인의 대응을 살필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자료는 당시 언론인들의 구술 증언이다. 이 글에서는 당시 부산지역 언론계에 종사했던 언론인 9명의 구술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술에 응한 언론인들은 지방언론 6명, 중앙언론 3명으로서 당시의 일선 기자가 중심

이지만 2명은 간부급이었다. 이 구술은 2007년과 2009년 및 2010년에 이루어졌으며, 성명은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이 구술을 통해 당시 언론과 언론인의 정황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구술자들의 1979년 당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구술자 현황(1979년 현재)

|   | 성명 | 출생연도  | 소속 언론사 | 직위        | 비고   |
|---|----|-------|--------|-----------|------|
| 1 | A  | 1948년 | 국제신문   | 기자        | 지방언론 |
| 2 | B  | 1953년 | 국제신문   | 사진기자      | "    |
| 3 | C  | 1938년 | 부산일보   | 사진부장      | "    |
| 4 | D  | 1943년 | 부산MBC  | 기자        | "    |
| 5 | E  | 1952년 | 부산MBC  | 기자        | "    |
| 6 | F  | 1946년 | 부산CBS  | 기자        | "    |
| 7 | G  | 1942년 | 조선일보   | 기자        | 중앙언론 |
| 8 | H  | 1941년 | 한국일보   | 부산경남취재본부장 | "    |
| 9 | I  | 1953년 | 중앙일보   | 기자        | "    |

## II. 유신체제 하의 한국언론

### 1. 유신체제의 언론통제

#### 1) 언론통제

##### 가. 유신헌법의 성립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기존의 헌법을 정지시키고 이른바 유신헌법을 선포하였다. 유신헌법은 이전까지 명문화되어 있었던 ‘언론의 허가제 불인정’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였

고, 국가안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제32조 2항)함으로써 언론통제의 최상위법으로 기능하였다.<sup>1)</sup>

### 나. 긴급조치의 발동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을 여러 차례 발동하였는데 결정판은 1975년 5월 23일에 선포한 긴급조치 9호였다. 이에 의하면 유언비어의 날조와 유포, 불법 집회와 시위,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비방하거나 개정 및 폐기를 주장 청원 선동하거나 이를 보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민주화운동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제도적으로 봉쇄해 버렸다.

### 다. 언론관련법의 제·개정

유신체제 때는 언론사상 어느 시기보다 많은 언론 관계 법령이 많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새로 제정된 법령 가운데 언론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것들은 ①군사기밀보호법(72. 12. 16) ②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73. 8. 8) ③방송법 시행령(73. 3. 21) ④영화법(73. 2. 16) ⑤영화법 시행령(73. 2. 17) ⑥광고우편취급규정(72. 10. 18) ⑦외국간행물 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72. 2. 17) 등이고 개정된 법률로는 ①형법(75. 12. 31) ②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72. 12. 16) ③공연법(75. 12. 31) 등이다.<sup>2)</sup> 이러

1) 김서중, 2005, 「유신체제 권력과 언론」, 안병욱 외 『유신과 반유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85쪽.

2) 유재천, 1991, 「한국언론의 생성과 발전과정」, 『한국의 언론』 I, 한국언론연구원, 61쪽.

한 언론 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오직 언론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 라. 언론통폐합

정당성이 부족한 독재권력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 언론통폐합인데 박정권은 1961년 쿠데타 후 대대적인 언론통폐합을 실시한 바 있고 10월 유신을 전후한 1972년부터 1973년에 걸쳐 언론통폐합을 강행하였다. 특히 지방지는 1도 1사 원칙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는데 이는 정부가 지역독점체제를 구축해 주는 대가로 비판을 무디게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또 통폐합을 할 때 지역의 1위 신문이 아닌 언론기관에 통합의 주도권을 주었는데 이는 그 혜택에 대한 보답으로 친정부 성향을 기대하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부산, 경북, 경남, 전남만 두 개씩의 일간지가 발행되고 나머지 지방은 모두 1도 1사주의가 관철되었다.<sup>3)</sup>

#### 마. 프레스카드제 도입

프레스카드제의 도입은 명분 상 사이버 언론을 줄이고 기자 임금을 현실화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신문기자의 자격, 취재의 자격을 정부가 좌우하는 것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심각한 정책임에도 언론기관 경영자들은 항의는커녕 1971년 12월, '언론자율에 관한 결정사항'을 채택, 자진 결의행식으로 지지하였다. 그 결과 1971년 10월에 5,057명이던 언론인이 1972년 12월에는 3,137명으로 줄어들어 전체의 38%인 1,920명이 해고되었다.<sup>4)</sup>

---

3) 김서중, 2005, 「유신체제 권력과 언론」, 안병욱 외, 『유신과 반유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85쪽.

### 바. 보도지침

미디어 오늘이 밝힌 바에 의하면 박정권은 1975년 5월 16일부터 1979년 11월 20일까지 4년 6개월에 걸쳐 중앙정보부가 언론기관에 보도지침을 내려 보냈다.<sup>5)</sup> 이 기간 중 동양방송에 하달한 879건의 지침을 분석해 보면, 전면 혹은 부분통제, 사전 혹은 사후통제를 실시하였다. 야당과 재야 종교계의 반체제 인사와 대학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구속, 재판 등은 전면 통제 대상이었다. 정책부진이나 실패,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 남북문제, 외교문제, 정부 요인들의 특정한 동정 및 군사문제, 군 장병의 안전사고, 총기난동사건 등은 전면적으로 보도를 금지했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발언이나 장관들의 답변 중에서도 불리한 것은 부분적으로 금지했다.<sup>6)</sup>

### 사. 물리적 통제

유신체제 하에서 언론인에 대한 물리적 취재 방해, 폭행, 구속 등이 빈발하였는데 그 주체는 주로 경찰과 군인이었다. 언론인 폭행사건의 대표적인 것이 1979년 8월의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이던 YH무역 여공들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취재기자 15명에게 가한 무차별 폭력이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언론기관에 대한 불법사찰이었다. 정보기관원이 상주하다시피 출입하면서 언론기관의 보도 내용에 간섭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던 시기가 유신체제기였다.<sup>7)</sup>

4) 김서중, 2005, 「유신체제 권력과 언론」, 안병욱 외, 『유신과 반유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6~197쪽.

5) 김서중, 2005, 「유신체제 권력과 언론」, 안병욱 외, 『유신과 반유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8쪽.

6) 김주언, 2008, 『한국의 언론통제』, 리북, 467~468쪽.

## 2) 권·언 유착

### 가. 언론인의 정·관계 진출

언론인의 정·관계 진출은 한국언론의 기회주의적 속성, 일부 언론인의 권력지향적 행태가 정권의 의도와 결합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유신체제 때부터였다. 1969년부터 1979년까지 언론인 출신이 문화공보부의 장관직을 점유했다. 1973년에 이르러서는 문공부의 최전선 언론통제관이 17명에 달했고, 기타 정부부처에서 언론인 출신으로 대변인에 재직 한 자의 수는 자그마치 11명이나 되었다. 또 유신정부는 각 신문사 별로 중견 언론인을 선발하여 유정회 국회의원에 임명했는데 1973년 구성된 9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정회 국회의원 중 언론계 출신자는 자그마치 18명이나 되었다.<sup>8)</sup>

### 나. 정·관계 인사의 언론계 진출

유신체제의 말기에는 정·관계 출신 인사들이 신문사나 방송사의 발행인, 사장으로 들어가서 정권 홍보에 협력하였는데 그 수는 7명에 이르렀다.<sup>9)</sup>

## 2. 유신체제와 언론인의 저항

### 1) 자유언론수호투쟁

#### 가. 동아일보의 자유언론실천선언

---

7) 김서중, 2005, 「유신체제 권력과 언론」, 안병욱 외, 『유신과 반유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203쪽.

8) 박기순, 1995, 『언론학의 이론과 연구』, 나남출판, 125~126쪽.

9) 박기순, 1995, 『언론학의 이론과 연구』, 나남출판, 126쪽.



유신체제의 철저한 언론통제에 맞서 언론자유를 실천하고자 하는 언론인의 선언은 1973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보다 본격적인 투쟁은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자들이 역사적인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하고 중앙정보부의 보도지침을 거부하면서부터였다. 박정권은 광고탄압으로 대응했고 기자들은 제작거부로 저항하였다. 광고탄압사태가 나자 전 국민은 열화와 같이 언론자유 실천운동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경영에 압박을 느낀 동아일보 경영진들은 박정권에 굴복하여 편집국에서 제작 거부 농성 중인 언론인들을 강제로 끌어낸 후 해고했다.<sup>10)</sup>

#### 나. 조선일보의 자유언론수호투쟁

조선일보의 신흥범, 백기범 두 기자는 1974년 12월 유정희 국회의원회원이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이 부당하게 게재되었다고 편집국장에게 항의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편집권 침해로 몰아 강제해직시켰다. 이에 편집국 직원 100여명은 비상총회를 열고 두 기자의 해임은 자유언론실천운동에 대한 억압이라 주장하며 해임 철회 농성을 전개했다. 이에 회사 측은 두 사람의 3개월 내 복직을 공약했으나 번복하였다. 기자들은 1975년 3월 기자총회를 열고 선언문을 채택하고 제작 거부와 농성에 돌입하였다. 결국 3월 11일 회사 측은 편집국에서 농성 중이던 기자들을 끌어내고 파면 16명, 무기정직 37명의 부당인사조치를 자행하였다.<sup>11)</sup>

10) 김주언, 2008, 『한국의 언론통제』, 리북, 95쪽 ;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2005, 『자유언론』, 해담술, 67~180쪽.

11) 김주언, 2008, 『한국의 언론통제』, 리북, 121~127쪽.

### 3. 부산지역의 언론 상황

#### 1) 언론자유수호투쟁

부산의 언론인들도 서울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1974년 10월 25일 언론자유수호선언대회를 열고 집회를 가졌다. 부산일보 기자들은 이날 하오 5시 편집국에서 언론자유수호선언대회를 열고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 내용은 ①국민의 편에 선 사실 보도로 언론인의 사명을 다한다. ②사실보도에 충실하기 위하여 외부의 작용을 일체 배격한다. ③국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고루 반영되도록 취재 편집 보도의 자유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라는 것이었다.

국제신문 기자들도 같은 날 편집국에서 모임을 갖고 최근의 언론사태를 중시하여 언론인의 권리와 의무를 통감하고 진실한 보도로 언론인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sup>12)</sup>

#### 2) 부산지역 언론탄압 사례

##### 가. B기자의 사례

1977년 2월 국제신문에 갓 입사한 B기자는 상사의 지시로 산복도로에 올라 가 부산 시내 전경 사진을 찍어왔다. 그런데 기관원이 오더니 신문을 펴 놓고 6부두와 바다가 찍힌 부분에 잠수함이 같이 찍혔다는 것이다. 일반 사람은 사진을 봐도 잠수함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군사기밀 사항이 찍혔다고 발행한 신문 15,000부 중에서 팔린 것 800부 빼고 14,200부를 회송시켰고, B기자를 처벌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

12) 부산민주운동사 편찬위원회, 1998, 『부산민주운동사』, 부산광역시, 291쪽.

B기자에 의하면 당시 국제신문에는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에서 담당자가 매일 왔고 국장에게 지시해서 안 되면 부장들까지 불러서 기사에 대한 지시를 했다. 국장이나 부장도 기관원의 출입에 불만이 많았지만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면 신문이 나가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순응했다고 기억한다.<sup>13)</sup>

#### 나. D기자의 사례

D기자는 부산MBC에서 ‘오늘의 취재수첩’이라는 생방송 프로그램의 앵커를 맡고 있었다. 1974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D기자는 다음과 같은 멘트를 했다.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리본을 달고 다녔는데 막상 성인이 되고 보니 그 말이 의미심장하다”고 하면서 세계인권선언문 일부를 소개했다. 그러자 다음날 바로 상사가 D기자를 불러서 오늘부터 그만 두라 하고 바로 앵커를 교체했다. 외부기관이 방송을 모니터하고 간섭한 결과였다.

또 1975년 3월 D기자는 갑자기 기관원에게 연행되어 중앙정보부 남산청사 지하실로 끌려갔다. 거기서 그는 5박 6일 동안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기자들이 독서회를 만들지 않았느냐?”고 추궁 받았다. 알고 보니 평소 알고 지내던 동양TV의 배 모 기자가 열흘 앞서 연행되었고, 그가 건국대 재학 중 김달남이라는 재일교포 유학생을 알고 지냈는데 김달남이 간첩이라는 것이었다. 후에 이 사건은 무죄로 판명되었지만 당시 부당한 혐의로 시달린 배 모 기자는 폐인이 되다시피 했고 D기자도 한동안 대인기피증으로 고생했다. 독서회에 대한 혐의는 D기자가 제임스 레스턴이 쓴 ‘신문과 정부와의 갈등’이라는 책을 사서 배 모 기자에

---

13) B기자 구술자료.

게 읽어보라고 권한 일을 침소봉대하여 뒤집어씌운 것이었다. D 기자가 연행되자 동료기자들이 퇴근하지 않고 밤새 편집국에 모여 있기도 하고, 사장과 간부들이 구명을 위해 노력했다.<sup>14)</sup>

#### 다. G기자의 사례

G기자는 조선일보 부산주재 기자로 근무했는데 1979년 6월 카터 대통령 방한 직전 무렵 조선일보에서 ‘방황하는 농촌’이라는 기획물을 연재했다. 그 취재를 위해 본사 기자 7명, 지방 기자 8명이 동원되었는데 G기자도 취재했다. 기사가 한번 나갔을 때 중앙정보부 요원 3명이 와서 연행했다. G기자는 지하 취조실에서 취재 내용에 대해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200여장 가까운 진술조서를 쓰고 다음날 풀려났는데 회사에서는 동료 기자들이 퇴근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나중에 보니 취재기자 15명이 모두 연행되었고 ‘방황하는 농촌’은 더 이상 기사화되지 못했다.<sup>15)</sup>

#### 라. I기자의 사례

I기자는 대학교 학보사 편집국장이었던 시절의 언론 통제 경험을 구술하였다. 1974년 2월 22일 통영 앞바다에서 해군과 해양경찰 훈련병 159명이 사망하는 해군 예인정(YTL) 침몰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망자 가운데 I기자의 소속 대학의 학생이 있어 학보사에 ‘그대 님에’라는 조사가 실렸다. 그 조사의 내용 중 군대의 식사(소위 짬밥)가 콩보리밥, 된장국보다 못하다는 표현이 들어 있었다. 그것이 보안대의 검열에 걸려 배포중지 명령이 내려

---

14) D기자 구술자료.

15) G기자 구술자료.

다. 당시에는 학생과에서 학교를 출입하는 보안대의 검열관에게 학보의 검열을 받았다. 난감한 처지에 빠진 I기자는 문제의 구절에 검은 도장을 찍고 그 위에 다른 문구를 인쇄한 종이를 일일이 붙여서 배포하였다. 대학교의 학보까지 정보기관이 검열을 하는 상황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sup>16)</sup>

### Ⅲ. 부마항쟁과 언론자유 의 문제

#### 1. 저항 이슈로서의 언론자유

##### 1) 학생 선언문에 나타난 언론자유

유신체제 하에서 언론자유 의 문제는 거의 모든 저항에서 가장 핵심적 이슈 가운데 하나로써 등장한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자유권의 핵심인 언론자유는 반유신 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에서 거의 반드시 들어가는 요구 사항이었다. 부마항쟁에서도 언론자유는 핵심 이슈의 하나이다. 부마항쟁에서 나타난 이슈들은 먼저 대학생들의 선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대학생들의 선언문은 총 3종인데 그 중 2종은 1979년 10월 15일에, 1종은 10월 16일에 발표되었다. 10월 15일의 선언문은 이진걸 그룹이 작성한 '민주선언문'과 신재식 그룹이 작성한 '민주투쟁선언문'이다.

먼저 '민주선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학원(대학)의 자유를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비민주적 학칙의 개정, 대학 자율화, 학생회(학도호국단)의 민주화, 집회의 자유, 민주적 행정 등

---

16) I기자 구술자료.

을 요구하며 어용 교수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였다. 둘째,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언론의 자유, 인권의 보장을 요구하면서 자유와 인권보장이 국민총화와 상충한다는 집권세력의 허구적 논리를 비판하고 있다. 셋째, 경제개발의 폐해에 대해 비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관료독점자본의 구조적 모순, 양적 확대의 추구, 대외종속의 심화, 부실기업, 노사문제의 심화 등을 비판하고 있다. 넷째, 독재정치를 비판하였다. 민주주의의 기능 마비, 민주참여의 배제, 민주인사 억압 등 제도화된 폭력성의 근원인 유신헌법의 철폐와 집권층의 퇴진을 요구하고 그것만이 민주회복과 조국통일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언문은 자유와 인권의 보장이 민주주의의 생명이며 본질이므로 이를 통해 공산체제에 대해 우월성을 견지할 수 있다는 반공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민주투쟁선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학혁명, 3·1운동, 무장독립투쟁, 4월혁명으로 이어지는 전통을 한민족의 자유 평등의 민주주의 정신으로 이해하고 그를 압살하려한 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권을 반역사적 지배집단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경제적 모순을 고발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현실을 식민지적 경제구조, 차관경제, 매관기업가, 관료지배세력, 농촌경제의 파탄,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용어로 비판하면서 모든 경제적 실정과 모순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YH사건에서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한다. 셋째, 독재정치를 비판하였다. 야당의 파괴 음모(신민당에 대한 탄압)는 민주공화국의 형식논리마저 부정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넷째, 대학의 자유가 유린되었음을 고발하였다. 군사교련, 정보원의 학원 상주, 학도호국단 등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악폐의 근원인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의 노래를 외치면서 나서자

고 호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역시 '민주선언문'과 마찬가지로 "적과 마주하여 스스로 펜을 총으로 대신하였"던 선배들을 언급함으로써 반공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10월 16일에 발표되었던 정광민 그룹의 '선언문'을 살펴보자.

여기서는 먼저 경제적 모순을 비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재벌그룹에 대한 특혜, 기업주의 사욕, 시장독점, 저임금, 소득분배의 불균형, 사회적 부조리, 서민층의 물질적 빈곤 등을 거론하고 있다. 둘째로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한 불합리한 사회상, 후진국적 낙후성, 강대국에 끌려 다니는 민족의 모습 등을 비판하고 있다. 셋째로 독재정치를 비판하고 있다. 유신헌법을 개인의 정권욕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보고 있으며 정당한 비판을 탄압하는 행태를 유례없는 독재로 비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비판을 집약하여 '폐정개혁안'이라는 이름으로 유신헌법 철폐, 안정성장정책과 공평한 소득분배, 학원사찰 중지, 학도호국단 폐지, 언론·집회·결사의 완전한 자유와 보장, YH사건에서와 같은 반윤리적 기업주 엄단, 전 국민에 대한 정치적 보복 중지 등 7개항의 요구를 내걸었다.

이상 3가지의 대학생 선언문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공통적으로 대학의 자유를 포함한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의 유린을 고발하고 있으며 언론자유와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sup>17)</sup>

17) 차성환, 2009(b), 「부마항쟁과 이데올로기」, 부마항쟁30주년기념심포지움 자료집, 6~9쪽.

## 2) 항쟁 중에 나타난 언론자유

대학생들의 시위가 도심 공간으로 옮겨진 후 학생과 민중이 어우러진 시위대가 외친 구호들은 참여자 측의 증언에 의하면, 유신철폐, 독재타도, 박정희 물러가라, 김영삼 제명 철회, 언론자유, 구속학생 석방, 야당탄압 중지, 학원자유, 부가가치세 철폐, 공화당 물러가라, 박준규 물러가라 등이었다.

경찰 측 자료에 의하면 부산에서 있었던 1979년 10월 17일 밤의 시위에서 나온 구호는 독재정권 물러가라, 언론자유 보장하라, 유신체제 철폐하라, 박준규 물러가라 등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산에서 있었던 1979년 10월 18일의 시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신 철폐하라, 독재 타도하자, 언론자유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되어 있다.<sup>18)</sup>

차성환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항쟁 참여자들의 행위 가운데 가장 많았던 행동은 ‘거리행진’(90.6%)으로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거리행진을 벌였으며 다음으로 많은 행동이 ‘구호 외침’으로 참여자의 66.0%가 참여했으며, ‘계엄군과 대치’ 35.8%, ‘관공서 타격’ 22.6%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호의 내용을 묻는 설문(기억하는 모든 구호에 대해 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유신철폐’가 92.5%, ‘독재타도’가 86.8%, ‘박정희 물러가라’가 37.7%, ‘김영삼 제명 철회’가 24.5%, ‘언론 자유 보장’이 22.6%, ‘구속학생 석방’이 22.6%, ‘야당 탄압 중지’가 17.0%, ‘학원 자유’가 11.3%, ‘부가가치세 철폐’가 1.9%로 나타났다.<sup>19)</sup>

이상에서 보듯이 시위 도중 구호의 빈도수에 있어서는 유신

18)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외, 1989, 『부마민주항쟁10주년기념자료집』, 건양기획, 37~40쪽.

19) 차성환, 2009(a), 「참여노동자를 통해서 본 부마항쟁 성격의 재조명」,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72~174쪽.



철폐, 독재 타도가 가장 많았지만 언론 자유의 구호도 상당히 자주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언론 자유의 요구는 대학생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널리 공감하는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0)</sup>

## 2. 저항 대상으로서의 언론

### 1) 언론인의 취재활동에 대한 거부감

위에서 본대로 언론 자유에 대한 요구는 유신정권의 언론통제에 대한 반대와 거부였지만 동시에 정권의 언론통제에 순응하여 나팔수 노릇을 하는 언론기관과 언론인에 대한 분노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항쟁 가운데 표출된 언론 자유의 문제는 주로 언론인과 언론기관에 대한 비판, 공격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언론 및 언론 활동에 대한 저항은 크게 나누어 언론인의 취재활동에 대한 거부감과 언론기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났다.

먼저, 언론인의 취재활동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한 사례는 많이 보고되었다. 특히 카메라를 든 사진 기자의 취재활동은 격렬한 공격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언론에 대한 반감과 함께, 시위 군중들의 신원 노출에 대한 공포감 때문이었다.

언론인의 취재 활동이 거부당한 최초의 사례는 10월 16일 오전 부산대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 온천장 쪽으로 시위행진을 하는 도중에 발생했다.

---

20) 1979년 10월 20일 아침 서면로터리에서 발견된 한 전단지에서도 언론의 문제가 나타난다. “동아대학교 만만세. 박정권 몰아내자. 박정권은 엉터리 방송, 엉터리 신문, 엉터리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군인, 학생, 국민들은 모두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조갑제, 1987(b), 『유고!』 2, 한길사, 81쪽)

부산일보 사진부 김승준 기자는 다른 취재를 마치고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다가 온천장에서 데모대를 봤다. 택시를 세우고 카메라를 차창 밖으로 내밀고 셔터를 누르는 순간 데모 학생들에게 둘러싸였다. 학생들은 카메라가 든 가방을 빼앗아 갔다. 김기자는 카메라를 돌려달라고 사정했다. 한 학생이 필름통을 꺼내 햇빛 앞에서 쪽 뽑아 보인 뒤 돌려주었다.<sup>21)</sup>

부산일보 기자는 필름과 카메라를 다 빼앗기고 후에 부산대학 측으로부터 변상을 받기는 했으나 사진을 남길 수는 없었다.<sup>22)</sup>

10월 16일 저녁 6시 20분경, 당시 동양방송(MBC-TV) 소속 취재 차량이 부영극장 앞에 나타났을 때, 학생 등 시위대는 “보도도 하지 않을 것을 무엇 때문에 취재하느냐?”라고 항의하면서 차량에 투석했다.<sup>23)</sup>

임수생은 이 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밖에서는 연속 전화가 걸려왔다. 항쟁이 시작되기 전에 출입처에 나가 있던 기자들이 현장에 도착해 취재를 하고 보내는 기사였다. 개괄적 내용은 항쟁이 확대 조짐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취재에 임하고 있는 기자들은 고민을 호소해 왔다. 기자 신분임을 밝혀도 시위대는 시위대대로, 진압대는 진압대대로 기자를 마구 폭행한다는 것이었다.<sup>24)</sup>

한편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도 신문에 보도가 되지 않는 사태에 대해 시민들은 신문사에 전화로 항의했다.

21) 조갑제, 1987(a), 『유고!』 1, 한길사, 295쪽.

22) C부장 구술자료.

23) D기자 구술자료.

24)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외, 1989, 『부마민주항쟁10주년기념자료집』, 건양기획, 117쪽.

그날 오후 『국제신문』 편집국엔 시민의 전화가 빗발치듯 들어왔다.

“오늘 데모 난 것 아니까?”

“왜 데모 기사가 안 났지요? 난 30년 독잔데요, 내일부터 신문  
끊겠습니다.”

“이 개새끼야! 할복이나 해라!”

“그쪽 사정이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만 용감한 학생들 생각해서  
잘해 주시오!”

“학생들만 피 흘려야 합니까. 당신네들은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끝까지 할 겁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심하게 할 겁니다.”

“내일은 신문에 나겠지요.”

이런 전화를 받다가 지친 내근 기자들은 전화기를 내려 놓기  
도 했다.<sup>25)</sup>

10월 16일 밤, 동아일보 부산지사의 사진기자 박문두는 플래시  
를 터뜨리면 봉변을 당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플래시 없이  
몇 장면을 찍었으나 쓸 수 있는 사진이 없었다. 그래서 17일 밤,  
시위대를 따라다니다가 기회를 포착해 플래시를 터뜨렸으나 봉  
변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플래시의 불빛에 놀란 젊은이 다섯 명이 그를 붙잡고 군중 속  
으로 끌고 갔다.

“뭐야?”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다.”

“신문에도 못 내는 사진 뭣하러 찍나?”

“동아일보 요즘 형편없어.”

“그래도 동아일보인데 놓아주자.”

---

25) 조갑제, 1987(b), 『유고!』 2, 한길사, 5~6쪽.

“필름은 뺏아야 한다.”

그들이 의논을 하는 사이 박 기자를 잡은 손이 풀리자 그는 후닥닥 뛰어 달아났다. “동아일보라는 간판이 나를 살렸다.”고 그는 생각했다.<sup>26)</sup>

박문두 기자는 이날 밤 다시 한번 촬영을 시도했으나 시위 군중에 밀려 결국 촬영에 실패했다. 그는 1974년 현대조선 폭동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곤봉 세례 속에서도 사진을 찍었던 일을 상기하면서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혔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의 당혹감을 조갑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부산봉기에선 사진을 찍어도 신문에 날 수 없다는 생각이 모든 사진 기자들을 조금은 소극적으로 만들었다. 꼭 찍어야겠다는 집념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박기자와 다른 대부분의 기자들은 부산데모를 취재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있었다. 긴급조치 아래에서는 이런 기사나 사진은 실을 수 없다는 자기 검열, 그것은 취재를 포기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많은 기자들이 그날 현장에 나왔으나 기록자로서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행동했다.<sup>27)</sup>

10월 17일 밤 10시경 국제신문 사진기자 김탁돈은 광복동에서 경찰이 시위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찍으려다 전투경찰에게 잡혀 폭행을 당했다.

전투경찰관 세 명이 건장한 김 기자의 허리를 끌고 가더니 발길질을 했다.

---

26) 조갑제, 1987(b), 『유고!』 2, 한길사, 25~26쪽.

27) 조갑제, 1987(b), 『유고!』 2, 한길사, 32쪽.

“국제신문 사진부 기잡니다.”

“기자면 다냐.”

“죽여버려!”

몽둥이·주먹·발길질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sup>28)</sup>

10월 18일 밤 8시경 합동통신 부산지사 양원 기자와 노외찬 기자는 취재차를 타고 시청 앞에서 일어난 시위를 취재하기 위해 나왔다가 시위대에게 공격받았다.

지휘자인 것 같은 한 청년이 맨 앞에서 언론기관의 취재차임을 알아챘다.

“어! 합동통신 차다. 조져!”

청년의 손짓에 따라 데모대는 이 포니차를 덮쳤다.

“우당탕탕!”

돌멩이와 유리병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가로수 버팀목을 뽑아든 군중은 이 차에 몽둥이질을 했다. ... 책가방을 낀 한 고등학생이 창 쪽으로 다가오더니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다.

“야! 이 새끼들아! 보도 똑똑히 해.”

“알았다.”

노 기자가 말했다. 그 학생은 더 크게 소리 질렀다.

“똑똑히 하란 말이다, 새끼들아!”

“알았습니다.”

... 한 청년이 운전석 창문으로 몽둥이를 쏘서 박으며 운전사를 찔러댔다. ... 다른 청년이 창을 통해 운전석 뒷자리에 앉은 양원을 겨냥하여 우산대를 찔렀다.<sup>29)</sup>

---

28) 조갑제, 1987(b), 『유고!』 2, 한길사, 36쪽.

29) 조갑제, 1987(b), 『유고!』 2, 한길사, 58~59쪽.

이처럼 부마항쟁의 현장에서 언론인들은 시위군중과 경찰 양측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경찰은 언론통제로 인해 생긴 언론경시 풍조로 언론인을 쉽게 무시했고 시위군중은 유신체제에 순치되어 자율성을 잃어버린 언론에 대한 분노를 공격적으로 표출했다. 언론인들의 수난은 계엄령이 내린 후에도 계속되었다. F기자는 취재 차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계엄군에게 붙들려 길가에서 10분 동안 손을 들고 서 있어야 했다. 기자 신분을 밝혀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시 경찰국 취재를 하고 걸어서 우리 회사를 오며는 그 가운데 계엄군한테 잡혀서 30분 동안 내가 아 10분 동안 잡, 벌서고 있었거든요. 손들고 있었으니까, 기자라 그래도 그 당시에 기자도 안 먹히더라고요.<sup>30)</sup>

## 2) 언론기관에 대한 공격

부산의 부마항쟁에서 10월 16일과 17일 양 일 간에 모두 28회에 걸쳐 공공기관이 피습되었다. 그 중 언론기관은 3곳이었는데 16일에 2차례, 17일에 3차례 공격 받았다. 공격 받은 언론기관은 부산문화방송(MBC), 한국방송공사(KBS) 부산방송국, 부산일보사였다. 이들 기관들이 공격 받은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월 16일 밤 10시경, 시위대들은 중앙동 부산일보사에 몰려가 투석으로 유리창을 수십장을 파손하였다.<sup>31)</sup>

10월 16일 밤 10시 30분경 4, 5백명의 시위대가 세관 맞은편에 있었던 MBC 부산방송국에 몰려와 사육을 둘러싸고 투석하여

30) F기자 구술자료.

31)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외, 1989, 『부마민주항쟁10주년기념자료집』, 건양기획, 117쪽.

유리창 15매가 파손되었으며, 나무 현판을 떼어내 철제 샷터 문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시위대는 방송국을 향해 “유신정권의 시녀노릇을 하지 말라!”고 외쳤다.<sup>32)</sup>

한국방송공사(KBS) 부산방송국에는 10월 17일 밤 9시 이후 동부경찰서를 공격하던 시위군중이 몰려왔다. KBS 부산방송국은 동부서에서 300미터 쯤 떨어져 있었다.

마침내 유리병과 돌멩이 포격이 시작되었다. 우당탕탕, 와지끈, 유리창이 깨지고 와 하는 함성을 지르며 군중이 구름처럼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경비원은 꽃밭에 엎드려 몸을 숨겼다. 그들은 마당에 세워둔 TV중계차를 각목으로 때려 박살을 냈다. 건물 안으로 난입하면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생길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이때 “군인들이 쳐들어 온다”고 한 시위자가 소리질렀다. … 데모군중은 혼비백산했다. 앞을 다투어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sup>33)</sup>

이날 밤 한국방송공사(KBS) 부산방송국에 이어 부산일보가 다시 공격받았고, 부산 MBC가 다시 시위대의 투석 세례를 받았다.

16일에는 부산일보사와 MBC 두 곳이 공격받았으나, 17일에는 세 곳으로 늘어난 것은 10월 16일의 대규모 항쟁이 있었음에도 그 소식을 (기독교 부산방송국에서 단신으로 취급한 것을 제외하면) 어떤 언론사도 보도하지 않은 데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컸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부산의 주요 언론기관 중 공격을 받지 않은 곳은 국제신문과 기독교(CBS) 부산방송국이었는데 그 이유는 각기 달리 해

32) D기자 구술자료.

33) 조갑제, 1987(b), 『유고!』 2, 한길사, 58~59쪽.

석된다.

국제신문은 사옥이 부산시 경찰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경의 방어병력이 주변에 있어 시위대가 접근할 수 없었다.<sup>34)</sup> 반면 이러한 지리적 조건과 함께 국제신문이 부산일보에 비해서는 친야적인 성격이 더 강했기 때문에 공격을 면할 수 있었다는 해석도 있다.

언론사에 대한 소위 친 정부적인 보도를 일삼는 언론사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 부산일보가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고 들었고 국제신문은 시청 바로 옆에 있어서 병력들이 지켜주는 부분도 있었고 길 건너가야 하는 지리적인 이점이랄까 특성 때문인 것도 있고 부산일보하고는 또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야성을 부산일보에 비해서 강하게 내비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격을 해야 되겠다는 시위대의 의지가 좀 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sup>35)</sup>

기독교(CBS) 부산방송국은 접근이 쉬운 광복동 입구에 사옥이 있었지만 시위대의 공격을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유신체제 하에서 용기 있는 보도 자세를 취했다는 점도 있겠지만<sup>36)</sup> 10월 16일 항쟁 발생 당일에 유일하게 부마항쟁을 보도했다는 것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34) 조갑제, 1987(b), 『유고!』 2, 한길사, 41쪽.

35) A기자 구술자료.

36) 조갑제, 1987(b), 『유고!』 2, 한길사, 41쪽.



## IV. 부마항쟁과 언론의 대응

### 1. 언론에 나타난 부마항쟁

#### 1) 지역 언론에 나타난 부마항쟁

부마항쟁이 발생하자 10월 17일 하오 3시 당시 구자춘 내무장관이 부산시장실에서 시위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이는 곧바로 보도되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는 10월 18일 자정에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새벽 2시 25분을 기해 치안본부를 통해 “부산에서 발생한 일련의 소요사태”에 대해 발표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sup>37)</sup> 이 시점까지 부마항쟁은 기독교(CBS) 부산방송국이 단신으로 시위 소식을 전한 것을 제외하면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못했다. 거의 모든 보도기관이 긴급조치 9호의 족쇄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계엄령 이후의 부마항쟁에 대한 보도는 지역 언론이든 중앙 언론이든 계엄사령부의 검열방침과 보도지침에 충실한 관제언론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다만 동아일보는 10월 18일 부산 항쟁을 객관적으로 알리는 기사를 내보낸 점이 돋보였다.

지역 언론에 나타난 부마항쟁 관련 보도 내용을 부산지역의 양대 일간 신문이었던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의 지면을 통해 살펴보자.

부산일보는 16, 17일 동안 부마항쟁에 대한 보도는 일체 없었고 10월 18일자 1면에 “부산 일원 비상계엄 선포” 기사를 톱으로 올렸다. 그런데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 대변인의 발표, 계엄사령부의 포고문,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 등 정부의 발표 내

---

37) 부산일보 1979년 10월 18일자.

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을 뿐 시위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시위 군중들이 어떤 주장과 요구를 했는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독자들은 기사만으로는 항쟁 그 자체의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또한 항쟁의 양상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방적이고 축소, 왜곡된 발표를 그대로 인용 보도하고 있을 뿐 독자적인 취재를 통한 객관적인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이 기사들은 예컨대 “대학생 3천여 명 연 이틀 소요”라고 보도함으로써 수 만 명에 이르는 학생, 시민들의 항쟁을 3천명의 대학생 시위로 축소하는 것이었다.

부산일보는 10월 19일에 “계엄사령관 담화 발표”, 10월 20일에 “마산·창원에 위수령 발동”, 10월 21일에 “18·19일 폭동에 가까운 소요, 마산 건물파괴·사제총기 쏘”, 10월 23일에 “부산·마산 통금시간 환원” 제하의 기사를 모두 1면에 게재하고 있지만 계엄사령부나 경찰의 공식 발표를 전달하는 것일 뿐 독자적인 취재에 의한 보도는 전무하다. 이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들 예컨대 10월 18일 저녁 부산 시청 앞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했던 시위나 계엄군들이 무고한 시민들에게 가한 무차별적 폭력 등은 전혀 보도하지 못했다.

부산일보는 10월 24일 부산과 마산의 통금 시간을 종전대로 환원한다는 계엄사령부의 발표를 보도하면서 “와, 거리마다 환호·활기 되찾아”라는 타이틀로 지역 민심을 전하는 기사를 게재했는데 환원 조치에 대한 환영의 분위기를 전달함으로써 역으로 계엄이 끼친 민폐를 조심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후 모든 언론이 10·26정변으로 도배가 되다시피 하면서 부산일보 역시 부마항쟁과 관련한 보도는 11월 29일자로 “부산·마산사태 20명에 실형” 제하에 계엄군법회의의 재판 결과 보도가 나오기까지 지면에서 사라졌다.

국제신문 역시 10월 18일 1면에 “부산에 비상계엄 선포” 제하의 기사를 톱으로 뽑아 정부대변인의 발표, 박 대통령의 담화, 계엄포고문 등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했고, 7면에는 치안본부의 발표, 구자춘 내무장관의 기자회견 등을 게재했다. 부산일보와 약간 다른 점은 구 장관의 회견을 일문일답까지 상세히 다룬 것인데 그 내용은 왜곡으로 가득 찬 것이었다. 예컨대, “구 장관은 16일의 소란으로 학생 2~3명, 경찰관 50여명이 다쳤다”고 언급했으나 이는 상식 밖의 발표였다.<sup>38)</sup> 국제신문도 부산일보와 같이 계엄당국의 보도지침에 충실한 보도로 일관했다. 이후 10월 19일부터 24일에 이르기까지 부마항쟁과 관련한 기사들이 부산일보의 기사들과 판에 박은 듯이 같은 것은 계엄당국의 지침에 충실히 따랐기 때문일 것이다.

## 2) 중앙 언론에 나타난 부마항쟁

다음으로 중앙 언론에 나타난 부마항쟁 관련 보도를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의 보도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중앙 언론이라고 해도 부마항쟁에 관한 보도는 검열을 받아야 했으므로 지역 언론과 사정은 같았다.

먼저 동아일보의 지면을 보면 10월 16일과 17일에 부마항쟁을 직접 다룬 기사는 한 건도 없다. 다만 17일에 “남조선해방전선의 망상”이란 사설을 통해 당시 적발된 남민전 사건을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 것이 눈에 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혼란과 동요를 이용하는 특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고 요즘 시국의 혼미상태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sup>39)</sup>

38) 국제신문 1979년 10월 18일자.

이 사설에서 언급된 “시국의 혼미상태”란 다른 무엇보다 부마항쟁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설의 시국관은 유신정권의 시각과 한 치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었다.

부마항쟁에 대한 직접적인 보도는 10월 18일자 1면 톱기사로 “부산에 비상계엄” 제하에 역시 정부대변인 발표, 계엄사령관 포고문, 대통령 담화 등을 게재하였다. 또한 7면에 부마항쟁과 계엄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 대부분의 기사는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었지만 “교문 밖 경찰 저지로 해산, 오후 서면·광복동 재집결” 제하의 기사를 통해 부마항쟁의 경과와 학생, 시민들의 구호 등을 그나마 객관적으로 보도했다. 이 기사는 정부의 발표를 통해서만 알 수 없었던 항쟁의 양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었다.<sup>40)</sup> 또한 동아일보는 호외를 발행하여 신속히 보도하려 했다.

검열의 허점을 이용해 부산의 항쟁을 객관적으로 보도했던 동아일보도 마산 항쟁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기사를 내보내지 못했다. 검열이 더욱 강화된 탓일 것이다. 동아일보는 10월 19일자 1면에 “내무부 발표, 밤 10시부터 마산, 창원 일원도 통금 2시간 연장”, 10월 20일자에 “마산·창원에 위수령” 제하의 기사가 1면 톱으로 실렸고, 7면에는 “저녁 8시 변화가 외등 꺼져 갑작스런 통금연장” 등의 관련기사가 실렸지만 짙막하게 거리 풍경을 스케치하는 데 그쳐 마산 항쟁의 양상을 짐작케 하는 내용의 기사는 없었다. 10월 22일자에 마산경찰서장의 기자회견을 “공공건물

39) 동아일보 1979년 10월 17일자.

40) “이런 기사가 검열에 통과될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동아일보 부산지사에서는 이 기사를 통과시키기 위해 피를 냈다. 문제의 기사 원고를 맨 밑에 깔고 그 위에 계엄에 협조적인 내용의 긴 기사 원고를 얹었다. 검열관은 읽어 내려가다가 그 원고몽치가 모두 그런 내용인줄 알고 통과 도장을 찍어버렸던 것이다.”(조갑제, 1987(b), 『유고!』 2, 한길사, 84쪽)

파괴 등 18·19 연 이틀 소요”라는 제하에 게재하면서도 경찰서장의 회전문만 인용할 뿐 별도 취재를 통한 기사는 나오지 않았다.

10월 26일에 이르기까지 동아일보에서 부마항쟁과 관련한 기사는 계엄사의 발표문을 전달하는 것이 전부였고, 여당과 야당, 미 대사관 등 정치권의 움직임을 전하는 기사들이 정치면을 채우고 있다.

다음으로 경향신문을 살펴보면 10월 16일과 17일에 부마항쟁과 직접 관련한 기사는 없다. 다만, 10월 17일자에 “이 부산시 시경국장 대기발령 인사조치, 후임 송제근 씨” 제하의 기사가 게재된다. 이 인사조치는 부마항쟁으로 인한 것이지만 배경 설명은 일체 없이 시경국장의 교체가 있었음을 알린다.

경향신문도 10월 18일부터 보도를 시작하지만 정부의 발표문을 인용, 보도하는 데 그친다. 10월 19일에는 “부산의 계엄과 질서회복”이라는 사설을 통해 “유신헌정체제는 이미 국민의 총의에 의해 그 정당성이 입증되었으며 국난을 극복하고 변영과 안정을 다지는데 가장 효율적인 제도임이 확인되었다”라고 하여 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관제 언론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후 10월 26일에 이르기까지 동아일보와 대동소이한 지면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10월 22일에 “부산 유언비어로 2명 구속”, 23일에는 “삼천포 거점 간첩단 사형선고”, “이기택 의원 선거법 위반 공판” 등의 단신 기사가 눈에 띄는 정도였다.

## 2. 부마항쟁에 대한 언론인의 대응

### 1) 데스크의 대응

부마항쟁은 언론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 충격

이 몰고 온 언론기관 내부의 분위기는 다음의 인용문에 잘 드러나 있다.

부산 시위는 언론계 종사자들에게 충격·분노·수치감을 함께 던져주었다. 16일 데모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은 이 큰 사건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알려야 한다는 조바심으로 안달이 났다. 민중의 돌팔매질을 당한 언론이었지만 한 조각 양심은 남아 있었다. … 별별 얘기가 다 나왔으나 언론계 내부에는 애당초 그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조직된 세력이나 집단적인 용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17일 아침 편집국 회의를 소집하거나 적어도 간부들끼리라도 보도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한 언론기관은 없었다. 구체적인 취재계획을 세우거나 기록으로라도 남겨놓자고 한 곳도 없었다. 모두가 자학하면서 스스로를 포기하고 비웃으며 이 경천동지의 대사건을 모른 척했다. 10월 유신 여덟 돌이란 사실은 충실하게 알리면서 수월하게 그날 치신문을 만들었다.<sup>41)</sup>

부마항쟁이 발생했을 때 부산지역 소재 각 언론사의 데스크는 어떻게 대응했던가에 대해 조갑제는 대부분의 기자들이 취재에 대한 회사의 지시를 받고 있지 않았다고 기록했다.<sup>42)</sup> 그런데 구술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는 각 언론사 데스크의 태도가 동일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데스크라 함은 각 언론사에서 일선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지시하고 통제하며 편집방향을 결정하는 간부급 언론인으로서 각 부서의 국장급, 부장급 이상의 인사를 말한다. 물론 이

41) 조갑제, 1987(b), 『유고!』 2, 한길사, 81~82쪽.

42) 조갑제, 1987(b), 『유고!』 2, 한길사, 32쪽.

들 역시 직간접으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통제 하에 있었다.

긴급조치 9호에 의해 그리고 여러 가지 통제 장치를 통해 유신반대운동의 보도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부마항쟁에 대한 취재를 적극적으로 지시한 데스크는 드물었지만 소극적이었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보면 차이점이 있었다.

당시 언론사 데스크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부마항쟁이 불법 시위이며 긴급조치 등에 의해 보도가 금지된 사안이므로 취재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인식하여 기자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재를 지시하지 않았던 유형이다. 둘째는 비록 보도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취재는 해야 한다고 인식하여 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취재하도록 지시한 유형이다. 셋째는 드물지만 적극적으로 취재하도록 지시하고 가능하면 보도하기 위해 노력한 유형이다.

그러면 각각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자.

먼저 첫 번째 유형으로 가장 대표적인 언론사가 국제신문이었다. 당시 국제신문 기자였던 임수생은 신문사의 고위층이 취재 봉쇄령을 내렸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시위대가 중앙동 부산일보사 유리창 수십 장을 박살내 버리고 시청 쪽으로 행진 중이다.” 그러면서 우리 신문사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 기자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다는 긴장된 표정, 흥분, 들뜬 모습이 되어 일손을 놓고 제각기 대형 유리창으로 몰려들었다. ... 기자들의 시선은 시청 앞 광장으로 쏠렸다. ... 이때 신문사 편집국 안에 문제가 생겼다. 일부 취재 기

자들과 내근 기자들이 현장으로 내다를 태세를 취하고 있을 때 신문사의 고위층으로부터 금족령이 내려졌다. 취재봉쇄령이었다. 이와 동시에 출입구가 모두 잠겨버렸다. 편집국 기자들은 독 안에 든 쥐 꼴이 되어 버렸다. 역사적 순간을, 바로 신문사 근처에서 전개되고 있는 역사의 현장을 기자들은 갇힌 편집국 안에서 대형 유리창을 통해 취재를 해야만 하는 비극을 맛보아야 했다.<sup>43)</sup>

당시 국제신문 사진부 B기자는 10월 17일 취재를 나가려고 하는데 편집국장이 나가자 말라고 했다. 그런데 B기자는 이러한 편집국장의 태도가 상부의 명령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고 해석한다.

“아, 뭐 데모한대면서 찍어야지” 그랬더니 “가지 마!” 하더라고요. ... “예?” ... 국장님 가지 말라는데 가지 말아야죠. 뭐. 우리 부장, 우리 부장은 뭐 ... 부장보다 높은 국장이 뭐라 하니깐 가마 [가만히] 있고 ... 계속 연락 들어오는 게 고성(高聲) 전파(傳播)가 뭐 계속 뭐 동부서를 돌멩이 날라 갔네 ... 유리창 깨졌네, KBS 왕창 내려앉았네, 하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아이 씨, 장비 좀 들고 나갈라 했더니 망원렌즈 들고, 망원렌즈 좀 들고 옥상 갈라 그래 ‘어데 [어디] 가?’ ‘옥상이요.’ ‘거긴 왜 가?’ ‘멀리서도 기록은 해 봐야죠.’ 그래서 올라갔죠. 안 보이더라고요.<sup>44)</sup>

또 다른 국제신문 사회부 A기자의 구술을 보면 당시의 분

43)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외, 1989, 『부마민주항쟁10주년기념자료집』, 건양기획, 117쪽.

44) B기자 구술자료.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A기자가 현장에 접근한 것은 17일이었고 그것도 취재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관심의 발로였다.

16일도 사회부에서는 그 말을 감히 꺼내는 기자가 드물었던 걸로 단지 귀에 들리는 소문 정도로, 고 당시 데스크에 굳이 말을 이래라 저래라 말을 꺼내지 않더라도 위에 선에서 알아서 함구하기도 하고 몸을 사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을 … 사태가 벌어진 몇 시간 뒤에야 알게 되고 혹은 그 다음날 알기도 했는데 제가 그 현장 속으로 뛰어든 것은 둘째 날, 17일입니까? … 송 선생이 저녁 무렵에 전화가 왔는데 … ○○형, 오늘도 사태가 격렬하게 전개된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가 봅시다, 해서 그래 하기로 약속하고 … 이틀 째 되던 날 현장 속으로 달려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sup>45)</sup>

다음으로 부산MBC의 데스크 역시 현장 취재에 대해 국제신문만큼 강력하게 제지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취재를 지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취재 봉쇄는 아니었지만 취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지나간 이야기니까 그대로 하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선배가 “야, 이거는 어차피 해 봐야 보도 못하니까 나갈 사안이 아니다.” 이래 된 거죠. “취재할 거 없으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sup>46)</sup>

역시 당시 MBC의 D기자의 다음과 같은 구술은 상황을 더욱

---

45) A기자 구술자료.

46) E기자 구술자료.

분명하게 보여준다.

답 : 개인적 기자의 생각과 그 소양, 자질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마는 대체로 그 때 당시에 시경 출입기자나 시청 출입기자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캡들이 이런 문제를 보도하지 않더라도 다음에 역사의 사실로 좀 기록해 두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죠. 마 그냥 기사 취재해서 써 봐야 나가지 않을 거니까 알아서 쓰지 않았고 취재도 할 필요 없었고 그래서 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황만, 상황 전개만 지켜보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문 : 어떤 신문사에서는 뭐 취재하러 가지 말라는 지시까지도 했다고 하던데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답 : 어, 본격적으로 그런 말은 없어도 그렇게 밖에 취재, 그 데모대를 따라 다니면서 취재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분위기였죠.<sup>47)</sup>

두 번째 유형은 비록 보도가 되지 않더라도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기자들에게 현장 취재를 지시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는 부산에 주재하던 중앙지들에 해당한다. 한국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사례를 각각 살펴보자.

한국일보의 경우 당시 부산경남취재본부장 H씨의 구술에 의하면 취재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현지 데스크라 할 수 있는 H씨는 물론 서울 본사의 데스크도 부마항쟁의 취재에 적극적이었다.

79년도는 어 제가 부산경남취재본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 부산대학 캠퍼스에서 몇 명이 모였다, 거기서 중요한 말은 이 러이러한 게 있었다. 이러한 것을 아주 축소해가지고 기사를

---

47) D기자 구술자료.

보내고 뒷이야기 옆에 몇 가지 이야기들은 전부 모아 가 [가지고] 상세하게 서울에다가 이제 정보 보고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줍니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그런 걸 아주 더 뭐 좋아했죠. 부산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상황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본사에 대비 상황도 어 만들기 위한 거죠. ... 경찰청에 둘, 시청에 하나, 중부동부서, 부산진서, 동래서 등에 각 1명씩 두면 약 7명이 ... 인자 취재를 하고 마산에 2명이, 2명을 배치해 가지고 마산과 연계관계 ... 이려고 이제 부산지사에는 어 내가 총 데스크인 어 내가 앉아 있고 카메라맨은 출동태세를 언제든지 갖추고 기사 정리 및 대기 기자 2명을 뒤 가지고 이런 걸 취재하기 시작했죠.<sup>48)</sup>

조선일보의 경우, 본사의 데스크에서는 취재 지시를 내렸고 기자들은 취재에 적극 임했다.

취재는 예를 들어 기자들이라는 거는 기사가 나고 안 나고는 그건 본사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다 하죠. 기사는 취재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고 본사도 지금은 어 기사 못 나가지만 언젠가 고 기사가 어 우리가 내보내줄 테니까 모든 자료는 다 빠짐없이 전부 다 사진들하고 다 올려라 해가지고 그 당시 취재한 거 전부 다 올렸죠.<sup>49)</sup>

동아일보 사진부의 경우, 본사의 사진부장은 부산의 일선 기자에게 사진을 찍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다른 부서의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

48) H본부장 구술자료.

49) G기자 구술자료.

“부장님, 현장을 보고도 셔터가 안 눌러집니다.”

“역사적인 현장인데 꼭 찍어야지요. 그러나 몸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으니 요령껏 최선을 다하세요.”<sup>50)</sup>

지방지의 경우, 부산일보 사진부는 시위가 발생하자 바로 기자 한 명을 파견하여 취재하도록 지시했고, 취재 도중 학생들에게 카메라를 빼앗겼던 바 있다. 그러나 다른 부서가 적극적으로 취재를 지시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그 때 부산대학교의 학생들이 시내로 데모대를 구성해서 시내로 나왔다고 해서 우리 기자 한 사람이 파견되었거든요. ... 근데 그 때 기자들이 사진 찍어서 제대로 게재도 못하고 이러니 이거 뭐 관심을 특별히 가질 의욕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전신만신에 [온통] 전화 하나면 모든 게 통제 당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sup>51)</sup>

지방지에 비해 중앙지의 지방 주재 기자들이 더 취재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기사의 게재 여부는 서울 본사의 데스크가 판단할 문제고 일선 기자들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보다 중요한 조건은 지방지에는 중앙정보부 등의 담당관들이 상주하고 있었고 중앙지의 지방본부에는 그렇지 않았던 차이가 있었다. 중앙지의 본사에 담당관이 있었고 기사를 판단하고 편집하는 것은 본사였기 때문에 지방까지 정보기관이 압력을 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sup>52)</sup>

---

50) 조갑제, 1987(b), 『유고!』 2, 한길사, 26쪽.

51) C부장 구술자료.

세 번째 유형은 적극적으로 취재하도록 지시하고 보도하려고 노력한 유형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언론사는 기독교 부산방송국이 유일하다. 당시 CBS는 10월 16일 오전 10시경 부산대학교에서 시위가 발생하자 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 오후 6시 30분 등 4차례에 걸쳐 단신으로 시위 소식을 보도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갔던 것은 일선 기자들의 취재와 보도에 대해 데스크가 적극적으로 보호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문 : ... 그걸 계속 내 보내는 동안에 기관이나 이런 데서 좀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까?

답 : 직접 연락은 없었지만 데스크 쪽에서 연락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데스크 쪽에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냈죠.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아마 제제가 많이 가해졌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sup>53)</sup>

물론 CBS 기자들이 자기 검열에 빠지지 않았던 것도 보도가 가능했던 결정적인 조건이었다. 기자가 사건을 보도하려는 단순하고 본능적인 욕구에 충실한 것, 기자라는 직업인으로서 직업윤리에 충실한 태도가 필요했던 시기였다.

하여튼 사건이 하나 벌어지면 각 적어도 세, 출입처 세 군데, 네 군데에서 옵니다. 경찰 측 출입기자, 관공행정 부서 측 기자, 시캡, 시청 4군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는 그 상황을 취합할 수밖에 없었,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놓치려고 누가 그

52) G기자 구술자료.

53) F기자 구술자료.

러겠습니까? 기자가, 기자 욕심인데. 일단 내는 게 원칙이니까  
머 뒤에 인자 뒷생각하는 것 없이 무조건 냈습니다.<sup>54)</sup>

## 2) 기자들의 대응

데스크의 대응에 대해 기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먼저, 데스크가 취재를 지시하거나 적극 옹호하는 경우는 기자들이 취재 때문에 고민할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데스크가 취재를 금지하거나 소극적인 경우에는 기자들로서는 매우 난처한 지경에 빠진다.

이에 대한 기자의 대응 역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가장 소극적이고 퇴영적인 대응은 현장에 가지 않는 것이다. 둘째, 비록 데스크의 지시가 없거나 취재를 금하는 분위기이지만 현장에 가서 현장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것은 기자로서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취재활동을 벌여 비록 보도되지는 못하더라도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이는 기자의 직업윤리에 충실하려는 자세이다.

여기서 첫 번째 유형은 굳이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당시 다수의 기자들은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데스크가 취재를 금하거나 소극적인 경우에도 기자들은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다. 다음과 같은 진술은 그런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

54) F기자 구술자료.

그 때 우리가 제일 줄병이었는데 “들어가라.” 저녁시간에 회사에서 보면 밑에 술렁술렁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그 때 시위대도 있고 경찰도 있고 옛날 시청 자리 거기 있었거든. 날이 술술 어두워지기도 하고 일단은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보기는 봐야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을 먹고 남포동으로 갔다가 그 당시 16일 날 9시경쯤 돼서 깜깜해지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경찰하고 시위대하고 최루탄 쏘고 도저히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 당시에 송원 양과점인가 ... 양과점이 있었어요. 하다가 거기 들어가 보니까 언론사 선배 중에서 그 당시 신문에 이 모 씨, 황 모 선배도 오고 기자들이 한 일곱, 여덟 명이 서로 만났어요. 서로 “왜 나왔느냐?” “기사도 안 쓸 건데, 씨 봐야 안 나갈 건데 말라고 [뭐 할려고] 나왔소?” 이러니까 “나는 구경하러 나왔지.” “니는 뭐 한다고 나왔노?” “나도 구경하러 나왔소.” 사실 눈에 찍어 놓고 싶었거든요. 그래 인자 거기서 세수를 하고 요즘 같은 성능이 좋은 카메라가 있었으면 플래시 안 터지고도 찍을 수 있었고 그 당시 카메라로서는 아주 불을 밝게 해야 나오지 안 그러면 밤 촬영이 안 되거든요. 만약 그걸 비쳤다면 시위대에게 집중 공격 받을 수 있고 받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말씀 드리겠지만 ... 증인들은 있지만 자료가 너무 없다는 사실입니다.<sup>55)</sup>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은 기자로서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기록자로서가 아닌 구경꾼으로서의 참여는 한계가 있었다. 참여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 기록을 남기지 못한 한계를 가지는 것이었다.

---

55) E기자 구술자료.

세 번째 유형은 바로 그런 역사적 기록을 남기기 위해 노력한 경우이다. 특히 취재에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진기자들이었다. 시위 군중 속에서 플래시를 터뜨린다는 것은 맞아죽을 각오가 없이는 할 수 없었다.<sup>56)</sup> 그런데도 용기 있는 사진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사진 자료는 매우 희귀하다.

현장의 기록을 남긴 기자들은 소수였지만 존재했다. 당시 마산에서 발간되었던 경남매일 사회부의 남부희 부장, 김현태 기자는 신문사 내부 보고서, 경찰, 시청 등 관공서에서 입수한 자료들과 직접 써 둔 원고를 『부마민주항쟁10주년기념자료집』을 발간하는 데 제공함으로써 부마항쟁의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하였다.<sup>57)</sup> 또한 국제신문의 조갑제 기자는 『유고!』 1, 2권을 집필함으로써 부마항쟁의 연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기록을 남겼다.

### 3. 부마항쟁에서 나타난 언론인의 유형

#### 1) 유신체제 하 언론인의 유형

##### 가. 체제종속형 언론인

유신체제 하에서 나타난 언론인의 유형 가운데 특히 임원이나 간부 중에서 많이 발견되는 유형이 체제종속형 언론인이다. 체제종속형 언론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체제옹호형이고 다른 하나는 체제순응형이라 할 수 있다.

체제옹호형 언론인들은 오랜 기간 권력의 언론통제에 순치되

56) 조갑제, 1987(b), 『유고!』 2, 한길사, 6쪽.

57)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외, 1989, 『부마민주항쟁10주년기념자료집』, 건양기획, 35쪽.



어서 스스로 자기 검열을 체질화한 인물들이다. 따라서 언론인이면서 언론인의 본래적 기능을 완전히 망각하고 권력의 대리인으로 행동하였다.

또 하나의 유형이 체제순응형 언론인들이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체제를 옹호하지는 않지만 권력의 압력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길을 택한다. 이들은 체제옹호형 언론인처럼 적극적인 정권홍보에 앞장서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조하는 유형이다.

체제옹호형 언론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당시 MBC 문화방송국의 사장이었던 몽향 최석채였다. 그는 자유당 시절 대구매일의 주필로 정론을 주장하다 탄압받은 소신 있는 언론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신체제 하에서 그는 언론을 권력에 종속시키는데 앞장섰다. 그는 기자들의 교육현장에 나와 “기자들은 한국적 민주주의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유신체제 홍보에 열을 올렸다.<sup>58)</sup>

#### 나. 직업윤리형 언론인

이 시기에 그나마 양심적인 기자들이 보여주는 유형이 직업윤리형 언론인들이다. 이들은 기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충실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 체제종속형 언론인들에게 저항한다. 그러나 이들의 저항은 권력의 언론 통제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 다. 저항투사형 언론인

저항투사형 언론인은 1974~5년에 나타난 자유언론수호운동에 참여한 경우처럼 권력의 언론통제에 정면으로 맞서 저항하는 언론인들이다. 그러나 이런 언론인들은 유신체제 하에서 모두 현직

58) D기자 구술자료.

에서 축출되어 재야 언론인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 2) 부마항쟁에서 나타난 언론인의 유형

### 가. 체제종속형 언론인

위 세 가지 유형 중 부마항쟁 중에 나타난 언론인 유형은 체제종속형과 직업윤리형이며 저항투사형은 이미 현장에서 축출되어 나타날 수 없었다. 체제종속형 언론인들이 언론기관을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국제신문의 임원, 간부의 경우처럼 기자들의 취재 자체를 적극적으로 막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마저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직업윤리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젊은 기자들 말고 데스크 이상의 중간 혹은 고위 간부들은 군부의 눈치, 그 당시 정치 상황을 자기 알아서 감지해서, 어떻게 보면 알아서 몸을 가누는, 알아서 기는, 그런 처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sup>59)</sup>

바로 이러한 언론인들이 언론기관을 주도한 결과 이들은 부마항쟁에 대해 유신정권과 똑같은 안보논리로 매도하면서 더 이상 방치하거나 미온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면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곡필을 휘둘렀던 것이다.<sup>60)</sup>

### 나. 직업윤리형 언론인

언론기관을 지배한 것은 체제종속형 언론인이었지만 많은 언

---

59) A기자 구술자료.

60) 김삼웅, 1990, 『유신시대의 곡필』, 신학문사, 270~280쪽.

론인들은 직업윤리에 따른 행동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체제종속형 언론인들의 지시, 명령에 순응하지 않고 항쟁의 현장에 나와 경찰과 시위대 양 쪽에서 공격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활동을 계속했으며 최소한 현장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직업윤리형 언론인들은 시위 군중의 거센 질타를 받아야만 했다. 사실 보도조차 못하는 언론인은 필요 없다는 민중들의 항의에 언론인들은 심한 자괴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이 가운데 부마항쟁을 보도한 부산 CBS 기자들이야말로 저항투사형의 언론인들은 아니었음에도 직업윤리에 최대한 충실했던 사례라 할 것이다.

### 3) 부마항쟁 이후의 언론 상황

이상에서 부마항쟁에서 언론자유와 문제의 어떤 형태로 표출되었으며 그에 대한 데스크와 기자들의 대응은 어떠하였는가를 주로 구술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유신체제에 순치되어 권력의 대리인이 되어 버린 체제종속형 언론인들과 그것을 거부하는 직업윤리형 언론인들의 갈등과 대립이 잠재되어 왔으며 그것이 부마항쟁을 계기로 현재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언론자유를 쟁취를 위한 투쟁에서는 독재권력의 타파와 함께 권력의 대리인이 된 체제종속형 언론인들의 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는 유신체제가 붕괴하고 민주화의 희망이 분출하는 한편, 신군부의 음모가 12·12 쿠데타를 시발로 서서히 준동하기 시작하는 이른바 '서울의 봄' 국면에서 첨예하게 나타나게 된다. 유신체제 붕괴 이후 언론인들은 기자협회를 중심으로 언론자유를 쟁취를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언론은

기존의 구태와 구습을 벗어나지 못한 채 정치권의 눈치만 살피며 능동적으로 여론을 이끌어내가지 못한다. 변화하는 상황에도 언론계는 독재치하에서 깊이 뿌리내린 수구·유신언론인들의 위상이 굳건함을 보여주었다.<sup>61)</sup>

급기야 1980년 4월 중순 일선기자들은 유신 언론인의 척결 없이 언론의 개혁과 민주화가 요원함을 인식하고 유신언론과 유신언론인 척결을 공식적으로 제기한다. 먼저 시작한 곳은 중앙이 아닌 부산지역 언론계였다. 부마항쟁 당시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던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던 부산 언론인들이었다. 5월 2일 부산진경찰서 출입기자들은 ‘우리는 참회한다’라는 장문으로 된 선언문을 통해 “지난 가을 민중으로부터 돌팔매를 맞았던 한국언론은 아직도 역사의 부름과 민중의 요구를 외면한 채 유신체제의 껍질 속에서 꿈쩍 않고 있다. 한국언론은 자유를 싸워 얻으려 하지 않고 공짜로 얻고자 하고 있다. 10·16 민주봉기 현장에 일하는 우리 기자들은 언론 자유를 요구하기에 앞서 먼저 역사 앞에서 단죄하고 민중 앞에서 참회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힌다. 이어 선언문은 “우리는 외부 압력에 굴복했을 뿐 아니라 알아서기는 풍조에 젖어들었음을 고백한다. 그리하여 부정부패를 눈앞에 두고도 붓대를 스스로 꺾었고 때로는 금력의 꾀에 빠져 진실보도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속죄하고 “민중이 이 땅과 역사의 주인공이며 대상인데도 우리는 권력과 재벌을 국민처럼 섬겨온 역사발전의 반역자였음을 뉘우친다. ‘하사품’ ‘큰 영애’ ‘시해’와 같은 봉건시대의 낱말들이 20세기의 마지막 연대에 한국언론에 등장한 것을 우리는 외부압력이나 편집권자에게 되돌리지 않고

61) 한국기자협회·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1997, 『80년 5월의 민주언론』, 나남출판, 45~59쪽.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인정한다”고 되뇌었다. 중앙사 기자들은 이 선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상당한 충격과 함께 깊은 자기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sup>62)</sup>

## V. 결 론

유신체제 하의 언론통제로 인해 한국언론은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언론이 정치적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민주주의 실현의 필수적 조건인 언론의 공정성이 사라졌다. 언론의 공정성은 사회적 현상의 중요성에 따라 의견과 사상의 흐름을 비례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이익이나 의견을 편파적으로 옹호 또는 왜곡함이 없이 전달해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공정성을 지켜갈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은 언론이 운영 및 편집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권력과 자본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언론의 비판기능과 다양한 관심의 접합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일차적으로 언론의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sup>63)</sup>

유신체제 하의 언론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이중의 지배 하에서 자율성을 상실한 것은 1975년의 동아일보사태가 명백히 보여주었다. 유신체제 하에서는 정치적인 사안 뿐만 아니라 다소라도 정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통제와 간섭이 가해졌다.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언론의 자기검열이 심화되고 언론의 자율성은 사라져 버렸다. 언론의 자율성 상실은 외적 억압에 기인할 뿐 아니라 내적 요인에 의한 것

62) 한국기자협회·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1997, 『80년 5월의 민주언론』, 나남출판, 60쪽.

63) 이정춘, 2000, 『언론학 원론』, 이진출판사, 60~61쪽.

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언론기관 내부에서는 체제종속형 언론인들이 편집권을 장악하여 저항투사형 언론인을 축출하고, 직업윤리형 언론인들을 통제, 억압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sup>64)</sup>

이런 상황에서 터져나온 부마항쟁은 제도언론에 대한 민중의 불신을 적나라하게 표출하였으며 언론과 언론인들은 당혹감과 자괴감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직업윤리형 언론인들은 데스크의 취재 지시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들은 언론기관의 편집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조직력이나 실천력이 없었으므로 사태를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체제순응형 언론인들이 장악한 언론기관은 계엄령 선포 이전에는 침묵을 지켰고, 선포 이후에는 계엄당국의 발표만 충실하게 전달하면서 정권의 안보논리, 체제논리를 대변하는 관제언론을 벗어나지 못했다. 부마항쟁이라는 역사적 대사에서 한국언론은 여전히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부마항쟁은 언론인의 각성을 촉구하는 거대한 충격이었다. 부마항쟁은 냉소와 자학에 빠져있던 기자들의 직업윤리를 일깨워주었다. 부마항쟁 이후 주로 평기자들이 중심이 된 직업윤리형 언론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언론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그 최초의 출발점이 부마항쟁의 진원지, 부산이었던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64) “계엄령 선포는 언론계의 이 고민을 일단 풀어주었다. ‘전화에 의한 단수 조정’은 사라지고 언론통제는 군의 검열로 일원화됐다. 이 기사를 실어야 하느냐, 몇 단으로 다룰 것인가, 신문에 난 뒤 귀찮게 굴 것 아닌가 등등의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다. … 신는다, 못 신는다, 줄여라, 키우자 … 편집국장과 기자 사이에 날마다 되풀이돼온 승강이도 없어지게 됐다. 김 기자는 정보부의 언론통제 기준보다도 우리나라 언론의 자체 통제기준이 더 비겁한 것이었다고 믿어왔다. … 1970년대 언론의 무기력은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다.”(조갑제, 1987(b), 『유고!』 2, 한길사, 82~83쪽)

## 【참고문헌】

- 김대상, 2004, 『부산언론사의 재조명』 도서출판 뉴-워드사.
- 김삼웅, 1990, 『유신시대의 곡필』, 269-280쪽, 신학문사.
- 김서중, 2005, 「유신체제 권력과 언론」 『유신과 반유신』 161~216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영재, 2005, 『대구경북언론사』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주언, 2009, 『한국의 언론통제』 77-230, 467-481쪽, 리북.
-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2005, 『자유언론』 67-180쪽, 해담술.
- 류한호, 2004,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커뮤니케이션북스.
-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민주언론운동』 통권 제21호, 1997년 5.6월 호.(특집 6월항쟁과 언론)
- 박기순, 1995, 『언론학의 이론과 연구』 103-139쪽, 나남출판.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외, 1989, 『부마민주항쟁10주년기념자료집』 105-222쪽, 건양기획.
-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1998, 『부산민주운동사』 부산광역시.
- 송건호, 1987, 『민주언론 민족언론』 두레.
- 안병욱 외, 2005, 『유신과 반유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유재천, 1991, 「한국언론의 생성과 발전과정」 『한국의 언론』 1, 18-84쪽, 한국언론연구원.
- 이정춘, 2000, 『언론학 원론』 59-80쪽, 이진출판사.
- 이효성, 2002, 『언론과 민주정치』 커뮤니케이션북스.
- 조갑제, 1987(a), 『유고!』 1, 한길사.
- 조갑제, 1987(b), 『유고!』 2, 5-90쪽, 한길사.
- 주동환·김해식·박용규, 1997, 『한국언론사의 이해』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 차성환, 2009(a), 「참여노동자를 통해서 본 부마항쟁 성격의 재조명」 172-174쪽,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 차성환, 2009(b), 「부마항쟁과 이데올로기」 6-18쪽, 부마항쟁30주년기념심포지움 자료집.
- 한국기자협회·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1997, 『80년 5월의 민주언론』 37-120쪽, 나남출판
- 한국언론학회, 2003, 『언론학 원론(상)』 범우사.
- 경향신문, 1979년 10월 16일 - 10월 26일자
- 국제신문, 1979년 10월 16일 - 10월 26일자
- 동아일보, 1979년 10월 16일 - 10월 26일자
- 부산일보, 1979년 10월 16일 - 10월 26일자

| 투고일       | 심사일        | 심사완료       |
|-----------|------------|------------|
| 2010.11.8 | 2010.11.30 | 2010.12.15 |

## 【국문초록】

본고는 1979년 10월 부마항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언론과 언론인들은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정치변동기의 언론이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한다. 이를 위해 주로 9명의 당시 언론인의 구술자료를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제2장에서는 유신체제 하의 언론통제를 살펴보았는데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와 각종 법령, 제도, 물리적 폭력 등이 언론통제를 위해 동원되었다.

제3장에서는 유신체제 하의 대표적인 언론자유수호투쟁으로서 1974년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자유언론실천투쟁을 다루었으며, 부산지역의 언론상황을 1974년의 언론자유실천선언과 언론탄압의 실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부산지역의 언론탄압은 구술자료를 통해 확보된 것인데 제2장에서 살펴본 각종 통제장치들이 어떤 양상으로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먼저 부마항쟁에서 저항 이슈로서 언론자유 문제가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를 당시 학생들의 선언문과 거리의 항쟁에서 외쳤던 구호를 분석하여 살펴본 후, 언론이 어떻게 저항대상이 되었었는가를 기자들의 취재활동에 대한 민중들의 거부감과 언론기관에 대한 공격을 통해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부마항쟁에 대한 언론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먼저, 부마항쟁에 대한 언론인들의 대응에 대해 데스크의 대응과 기자들의 대응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데스크의 대응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았다. 첫째는 부마항쟁이 불법 시위이며 긴급조치 등에 의해 보도가 금지된 사안이므로 취재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인식하여 기자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재를 지시하지 않았던 유형이다. 둘째는 비록 보도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취재는 해야 한다고 인식하여 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취재하도록 지시한 유형이다. 셋째는 드물지만 적극적으로 취재하도록 지시하고 가능하면 보도하기 위해 노력한 유형이다. 또 기자들의 대응에도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현장에 가지 않는 것, 둘째는 비록 데스크의 지시가 없거나 취재를 금하는 분위기이지만 현장에 가서 현장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취재활동을 벌여 비록 보도되지는 못하더라도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이는 기자의 직업윤리에 충실하려는 자세이다.

또 유신체제 하의 언론인 유형을 체제종속형, 직업윤리형, 저항투사형의 셋으로 나누어 보고, 부마항쟁 당시 언론인의 유형은 체제종속형과 직업윤리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체제종속형과 직업윤리형 언론인 사이의 갈등은 유신체제 붕괴 이후 첨예하게 나타났고 1980년 4월 부마항쟁의 진원지였던 부산에서 처음으로 유신언론인 척결 문제가 제기되었다.

**핵심주제어** : 부마항쟁, 언론통제, 언론자유, 체제종속형 언론인, 직업윤리형 언론인, 저항투사형 언론인

【Abstract】

---

## **The Busan-Masan Uprising and the attitude of Korean journalism**

Cha Seong-whan / Pusan National Univ.

---

The subject of this article is the attitude of the Korean journalism during the drifting political time when the Busan-Masan Uprising broke out in October 1979. For this, this article examines how news media and journalists of South Korea responded to the political changes during that time through the records of interviews of 9 journalists.

The main topic of each chapter is as follows.

The Chapter 2 examines how the Yusin Constitution suppressed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freedom of press.

The Chapter 3 deals with the fightings for the freedom of speech by the well-known *Dong-A Ilbo* and *Chosun Ilbo* in 1974 and the situation of the journalism in Busan during that time.

In Chapter 4, I analyzed how the journalism was the target of the people's demonstration and resistance against the Yushin regime by an analysis of the declaration and slogans of students who took to the streets during the Busan-Masan Uprising.

In Chapter 5, I analyzed the attitudes of journalists during the Uprising. There were three types of deskmen:

The first type thought that the Uprising was an illegal demonstration, therefore coverage of it was unnecessary. They either banned the reporters' access to the scene of demonstration

or simply did not tell reporters to go and cover the incident.

The second type thought that the news could not be reported, but at least news gathering was necessary and let reporters go to the street.

The third type of deskmen was rare, who ordered news gatherings by reporters and tried to report the news of Busan-Masan Uprising.

And there were also three types of reporters.

The first did not go to the demonstration scene. The second type of reporter went and watched the situation of uprising but did not gather news. The third type of reporters gathered news and tried to keep historical records. This attitude seems faithful to the professional ethics of a journalist.

The journalists under the Yusin regime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journalists subordinate to the Yusin regime; journalists faithful to professional ethics; journalists who were fighters resisting against the Yusin regime.

Troubles between subordinate journalists and the ones faithful to professional ethics was sharpened with the collapse of the Yusin regime. The issue of expelling the Yusin - journalists was raised by the journalists in Busan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 after the Busan-Masan Uprising in April 1980.

**Key Words** : the Busan-Masan Uprising, the control of press, the freedom of press, journalists subordinate to the Yusin regime, journalists faithful to professional ethics, journalists who were fighters resisting against the Yusin regime.